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

– 행정안전부, 2023. 2

□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(ISSB)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·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,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* 투자·경영에 있어 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

○ 금번 방안은 기업의 ESG 관련 대응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,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(12.9)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.

□ 정부는 「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」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(추진배경)

□ ESG는 UN PRI* 등을 통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, 글로벌 대기업·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·투자가 확산되었고,

*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: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

○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.

□ 특히,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.

○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(ISSB) ESG 공시 국제표준화, 유럽연합(EU)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*(ESRS) 적용,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.

*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: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및 ESG 공시기준 제시

○ 유럽연합(EU)은 탄소국경조정제도*(CBAM)·공급망 실사**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·협

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·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.

*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

**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,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

□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*을 구체화하는 「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」을 마련하게 되었다.

*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, ②중소·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, ③공공기관 ESG 경영, ④ESG 채권·펀드 활성화, ⑤시장자율규율체계, ⑥공공부문 ESG 투자,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

(주요내용)

1 (ESG 공시제도 정비) 글로벌 기준·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,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.

○ ISSB 한국인 위원 활동, SSAF*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,

*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: ISSB 공식 자문기구

–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·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*할 예정이다.

*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·자본시장법령 등 개편을 통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,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 등 추진

○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*간 내용이 유사·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·의무이행간주** 등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.

* 공시제도 : 지속가능경영보고서, 기업지배구조보고서,
공개제도 : 환경정보공개제도,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,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

**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

2 (중소·중견기업 지원) 중소·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 수출·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.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·컨설팅 확대,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,

* 사내전문가 육성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추진

○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.

3 (ESG 투자활성화) 민간의 ESG 채권·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,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것이

다.

○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,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*을 마련할 예정이며,

* 사회적프로젝트 범위 · 사례 · 예시, 워싱방지 등을 위한 사전 · 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

–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*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*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: 모지수(예: KOSPI 200)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

○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,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「ESG 평가기관 가이던스」를 마련할 계획이다.

4 (ESG 정보 · 인력지원체계 구축)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 · 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.

○ ESG 경영지원 플랫폼, 투자플랫폼,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(링크제공)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

○ 특성화 대학원 · 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(커리큘럼)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.

5 (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) 공공기관 ·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 · 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.

○ 먼저,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

* ('21)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, ('22)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, ('23) ESG 위원회(예) 등

○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 · 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6 (추진체계)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.

○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,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동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*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, 2023년 초에 kick-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.

* 기재부, 산업부, 환경부, 중기부, 고용부, 행안부, 금융위, 공정위 등

Ⅰ 추진배경

◇ 기업 · 투자기관의 환경 ·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· 투자가 민간중심으로 확산

○ ESG는 UN PRI*('06년) 등을 통해 본격 등장하여, 블랙록 ESG 투자선언('20.1월) · 글로벌 기업 ESG 경영 도입 등 민간중심으로 확산

* Principles for Responisble Investment :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

◇ 코로나19,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 → 최근 국제기구, EU 등의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

○ ISSB(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) ESG 공시 국제표준화('23.上), EU ESRS*,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('22년말)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 강화 전망

*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: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

○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*(CBAM) · 공급망 실사**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 · 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· ESG 이행 부담 부과 예정

*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

**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,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

◇ 정부 지원 강화 · 인프라 구축 고도화 → 민간 중심의 자생적 ESG 생태계 조성 가속화 필요

※ 새정부 국정과제(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· 세제 지원 강화 등)에 ESG 포함

○ 정부는 ESG 글로벌 논의 확산에 따라 국내 민간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'ESG 인프라 확충 방안' 마련('21.8월)

*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, ②중소 · 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, ③공공기관 ESG 경영, ④ESG 채권 · 펀드 활성화, ⑤시장자율규율체계, ⑥공공부문 ESG 투자,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

■ K-ESG 가이드라인 · 녹색분류체계 마련, ESG 투자플랫폼 구축,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· 컨설팅 확대 등 추진중

○ ESG 공시 국제표준화, EU 공급망실사 등으로 국내 공시체계정비, 중소 · 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 국내 ESG 인프라 지속 구축 필요

☞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비하고,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「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」 추진

II ESG 국내외 현황

1 ESG 국제 현황

◇ (정부 · 국제기구) 기후위기 · 양극화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,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 중

○ ISSB 국제표준화, EU ESRS, 미국 SEC 기후공시의무화 등 추진중

■ IFRS(국제회계기준) 재단은 ISSB(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)를 설립해 ESG 일반 및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국제표준화 추진('23.上)

* ('22.3월) 초안 발표 → ('22.7월) 전세계 의견 수렴 → ('23.上) 최종안 발표

■ EU는 ESRS 마련*을 통해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EU 기업·외국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** 예정

* ('22.5월) 초안 발표 → ('22년말) 의회 통과 → ('24.1월) 시행

** ('24년) NFRD 적용 대상 기업 → ('25년) NFRD 비적용 대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 → ('26년) 상장중소기업, 소규모 은행 및 종속 보험회사 중 일정규모 이상

■ 미국 SEC(증권거래위원회)도 '기후공시 의무화 규정'을 통해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 확대 예정('22년말)

* ('23년) 시총 7억달러 이상 기업 → ('24년) 시총 0.75억 달러 이상 기업 → ('25년) 시총 0.75억달러 이상이거나 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

○ EU는 공급망실사 등을 통해 EU내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거래기업의 ESG 경영 관리 의무화 계획

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('23년 시범도입)

■ EU는 ESG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를 마련('23년 시행)·개선(원전 등 포함 의회승인, '22.7월)하였고 사회적분류체계(안)도 발표('22.2월)

* 녹색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활동으로 분류를 위한 기준 및 원칙

◇ (ESG 투자) 주요 금융·투자기관을 중심으로 ESG 투자 기반 마련중이며, 코로나 19 이후로 ESG 투자에 대한 수요 급증

○ 블랙록* 등 자산운용사들은 투자기업에 ESG 경영 요구 확대,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ESG 투자 확대

* '22.1월 연례 주주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직원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언급

■ 세계 주요 공적연기금도 자체 평가기준 수립 등을 통해 기업에 ESG 경영 전환 요구

* CalPERS(美 공무원 연금)는 Net-Zero Set Alliance에 가입해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들의 탈탄소화 유도

○ 글로벌 ESG 투자규모는 '20년에 35조 달러를 넘었고 '25년에 50조달러 이상 전망(글로벌 지속가능투자협회)

◇ (ESG 경영)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 강화,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통해 ESG 경영 추진중

○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* 활성화중이며, 글로벌 기업들이 온실가스 간접배출량**까지 공시하며 협력기업의 배출량 감축 요구

* 주요 52개국 매출상위 100개 기업 중 80%가 지속가능경영공시 수행('21년, KPMG)

** Scope 3 : 기업 조직경계 외부에서 기업활동에 따라 유발된 배출(협력업체 배출량 포함)

○ 구글·애플·BMW 등 주요기업들은 RE 100·RBA* 등을 선언하고 협력기업에도 참여 요구

*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: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사업 연합체

◇ (ESG 평가·컨설팅시장) ESG가 확산되며 기업 ESG 리스크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 시장이 형성·성장

○ 주요 기관*들이 ESG 평가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중이고, ESG 데이터 수집·제공 시장도 활성화

* S&P, Bloomberg, MSCI 등

○ 글로벌 로펌·회계법인·컨설팅 기업은 글로벌 대기업 및 금융회사 대상으로 다양한 ESG 컨설팅 서비스* 제공

* 지배구조 개선, ESG 공시, 투자전략, 리서치 등

2 ESG 국내 현황

◇ (ESG 공시) 상장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

○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·S)는 자율공시이며, 기업지배구조보고서(G)는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의무 공시

○ 삼성·SK 등 주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ESG 보고서 공시중이며, '21년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80개사

◇ (ESG 투자)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선언('19.11월) 이후, 주요 투자기관들의 ESG 투자 급증

○ 국민연금은 ESG 투자 확대('22년 AUM의 50% 목표),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('21.11월) 마련 등 적극 주도

■ 주요 금융사는 ESG 투자 목표 설정, 전담조직 신설, UN PRI ('20년 8개사 → '21년 12개사) 참여 확대 등 ESG 투자 활성화 추진

* 신한금융 ESG 전담조직 신설, 한화자산운용 ESG 액티브펀드 출시 등

○ 국내 ESG 투자규모는 '20년 이후 크게 증가*

* ESG ETF(조원) : ('18) 0.3 → ('21) 1.6, ESG 채권(조원) : ('18) 1.25 → ('21) 86.8

◇ (ESG 경영)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중

○ 삼성, SK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*·공급망 관리 등 ESG 경영 적극 추진*중

* 삼성 全계열사 ESG 사업계획 수립, 현대차 '25년 배터리·수소전기차 67만대 목표 등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, 전문인력 부족·비용부담 등으로 ESG 준비는 미흡한 상태

* 대한상의의 수출기업(300개) 공급망 ESG 실사 설문조사 : ESG 경영수준 (매우낮음) 41.3%, (다소 낮음) 35.9%, (다소높음) 21.6%, (매우높음) 1.2%

◇ (평가 및 컨설팅 시장) ESG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ESG 평가와 컨설팅 시장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조성

○ 서스틴베스트, 대신경제연구소 등은 국내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·제공, 로펌·회계법인 등은 ESG 컨설팅 사업에 참여

Ⅲ 향후 정책추진 기본방향

정책 목표	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
핵심 전략	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
정책 과제	❶ ESG 공시제도 정비 ·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· ESG 공시·공개제도간 연계강화
	❷ 중소·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· 중소기업 ESG 경영전환 지원 ·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·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
	❸ ESG 투자 활성화 · ESG 채권 발행·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·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지원 강화
	❹ ESG 정보·인력 지원체계 구축 · ESG 정보 제공·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· ESG 전문인력 양성
	❺ 공공부문 ESG 선도 · 공공기관 ESG 경영 촉진 · 연기금 ESG 투자 확대
추진 체계	❻ 민관 합동 ESG 협의회(가칭) · (구성) 기재부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 + 민간전문가

Ⅳ ESG 인프라 고도화 주요정책과제

1 ESG 공시제도 정비

◇ 글로벌 기준·국내 실정 등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,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병행

1 글로벌 공시 표준화 등에 대비해 공시체계 정비

○ (국제) ISSB(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 등 ESG 공시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

* ISSB 공시 초안에 대한 한국의견서 제출('22.7월, 회계기준원에서 산업계 등 의견수렴)

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*,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**에 한국의 회원국 가입 추진('22년말) 등을 통해 국내의견 전달 노력

* ISSB는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14명 위원 중 한국인 1명을 위원으로 선임('22.7월)

**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(지속가능성기준 자문포럼)

○ (국내)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·비교가능성 등 제고를 위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마련 추진('23년)

*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, 자본시장법령 등 개편 방안 검토

■ ESG 공시기준 국제 논의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국내기업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및 세부일정 구체화

*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일정(안) ('21.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) :
('25년) 일정규모(예: 자산 2조원) 이상 → ('30년) 전코스피 상장사

■ KSSB* 설립 등을 통해 ISSB 국제표준, 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기준 등 마련 추진

*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(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로 설립)

2 공시제도와 각부처 정보공개제도간 연계 강화

* 공시제도 : 지속가능경영보고서, 기업지배구조보고서

** 공개제도 : 환경정보공개제도,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,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

○ ESG 공시제도와 각부처 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·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* 등을 통해 조정**하여 기업 공시부담 완화('23년)

* (예) 근로형태 현황 공시 '소속외 근로자수'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'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' 지표 유사 → 직원이 아닌 근로자수로 명칭 조정

**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,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등 개정 검토

○ 중장기적으로 ISSB 국제표준 등에 따른 ESG 공시관련 법령 개정 등에 맞춰 의무이행간주* 점진적 도입

*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 공시한 것으로 간주

■ ESG 공시항목 중 의무이행간주가 가능한 항목*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추진

* 국제적중요성, 실현가능성(정보취합단위, 시스템 연계 등) 등 고려해 의무이행간주 항목 지정(예 : 용수사용량, 정규직 근로자수 등)

2 중소 · 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

◇ 중소 · 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, 수출 · 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제공

1 중소 · 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

○ (ESG 확산) 기업의 ESG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한 K-ESG 가이드라인('21.12월)을 규모별*('22년) · 업종별**('23년~)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

* 중소 · 중견기업 K-ESG 가이드라인 : 중소 · 중견기업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ESG 항목 선정, ESG 경영체계 구축안내,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 제시

** 자동차, 전자, 바이오 등 주요 업종 마련

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자가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고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· 심층진단을 실시*('22.12월)

* 업종별 · 기업유형별(수출, 대기업협력사, 고탄소기업 등) 특성에 맞게 배점 · 지표를 차별화하고, 누적 DB에 근거한 업종별 비교분석 제공

■ K-ESG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의 이용편의성 · 실용성 제고 등을 위해 상호 연계 강화 및 홍보 방안 등 검토

○ (교육 · 컨설팅) 중소 · 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교육 · 컨설팅 확대

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*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대상기업 확대 및 일터혁신** 컨설팅 사업 확대

*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· 이행방안에 대해 컨설팅(50인 미만 기업 대상 추가)

** 소규모 ·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임금체계 · 작업 관행 개선 등 일터 혁신을 위한 컨설팅 제공

■ 중소 · 중견 대상 사내전문가 육성 과정*을 수도권 중심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지방으로 확대**('22.12월)

*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, 평가 대응 등 교육

** 지역별로 반도체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업종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

○ (인센티브제공)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■ ESG 포상 · 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방안 추진(~'23년)

■ 중소 · 중견기업의 저탄소사업 전환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* 규모 확대

* 기후대응보증(기보 및 신보, '23년 각각 5,000억원), 에너지전환자금(산은, '22.년 1조원), 지속가능연계대출(기은, '22년 2,000억원)

■ 벤처 · 스타트업계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해 「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」('22.7월)를 적용한 ESG 전용펀드 조성('22.12월)

* '22.12월말 200억원 조성 예정(모태펀드 100억원 출자)

■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비용부담 없이 측정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간이 MRV(측정·보고·검증) 시스템 구축*('23년~)

* (측정·보고) 에너지사용량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가진단 → (검증) 에너지공단에서 한전 전력데이터 등을 활용해 검증확인서 발급

2 공급망 실사 대응 강화 등 수출·협력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고 업종별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수출·협력기업의 ESG 대응력 향상 추진('23년~)

■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실사 모의평가·컨설팅 등 지원

* ('22년) 시범사업(자동차(부품), 전자 산업 등 최대 50개사 선정) → ('23년~) 정식사업으로 확대

○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저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*해, 대기업 협력사 등의 피해가능성 최소화 노력

* 산업부를 중심으로 EU에 CBAM 면제·감면 요구,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 개정 요구 등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 추진 중

○ 자본조달과 해외수출시 기관투자자 및 산업얼라이언스* 등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모범사례 발굴·확산

* 전자, 자동차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연합(예: RBA(전자 등), Drive Sustainability(자동차), Responsible Steel(철강), PSCI(바이오의약) 등)

■ 자율공시에 대한 검증시 중소·중견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·기준 선택 폭 확대를 위해 민간 자율검증기준 마련

○ 대기업의 협력사(중소기업)에 대한 ESG 경영수준진단,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공('22년~)

* ESG 경영교육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세액공제(조특법시행규칙 개정, '22.3월)

○ 대기업과 중소·중견기업간 컨설팅 등 실질적 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네트워크 포럼('22.2월 출범)을 ESG 산업네트워크로 확대·개편('22.12월)

* (포럼) 정보공유 → (네트워크) 컨설팅, 설비투자 등 실질적 지원

○ 수출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'ESG 수출 가이드북' 발간 등 추진('22.12월)

3 ESG 투자 활성화

◇ 민간 ESG 채권·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 개선하고, ESG 평가의 최소 자율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

1 ESG 채권 발행·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
○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추진중인 시범사업*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녹색분류 체계 개정('22.12월)

* 6개은행(산은, 기은 등), 4개기업(한수원 등) 참여(4~11월)

■ 녹색분류체계 개정사항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('22.12월)

○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 제시 및 투자 유도 등을 위해 '사회적분류체계'(Social Taxonomy) 연구('23년~)

* 인권, 근로자 안전, 일자리, 소비자 권익, 지역사회(산업), 공급망 협력, 공정전환 지원 등을 사회활동으로 규정

○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ICMA(국제자본시장협회)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* 마련('23년)

* 사회적프로젝트 범위·사례·예시,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·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

※ ICMA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- (프로젝트 범주)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직접 목표
- (평가·선정) 발행기관은 사업 적격성 및 사회적목표와의 부합성 등 투자자에 설명
- (자금관리) 자금흐름이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검증,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공개
- (외부검토) 외부검토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채권에 부합한지 검증

○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'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' 마련('23년)

○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* 개발('23년) 등 ESG 지수** 다양화 추진

*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: 모지수(예: KOSPI 200)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

** ESG 지수 : ESG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의 시가총액 지수(거래소는 현재 KRX ESG Leaders 150 등 10개지수 산정)

○ SRI*채권의 적격투자(워싱방지)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후보고(자금사용처 투자자에 보고)의 질적 향상** 유도

* 녹색·사회적·지속가능채권 등을 포괄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ESG 채권과 동일 → SRI 채권으로 등록되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채권 관련 정보 공시

** (예) 기후채권기구(CBI) 등의 사후보고 관련 발행기관 모범사례 권고안에 따라 사후보고서

작성 권고

2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ESG 평가 지원

○ IOSCO(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) 권고안을 기초로 산업계·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「ESG 평가기관 가이던스」 마련('23.1/4분기)

※ IOSCO 권고안('21.11월) 중 'ESG 평가기관'에 관한 부분(요약)

- ESG 평가방법론 및 원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
- ESG 평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
- 평가의 독립성·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, 관계 등 회피
- ESG 평가방법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적인 공개와 투명성 목표

■ ESG 평가의 공정성·투명성제고를 위해 정보공개,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 제시

○ 온라인 교육·포럼 등을 통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활용을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가이던스 보완

4 ESG 정보·인력 지원체계 구축

◇ ESG 정보이용자의 활용도·편의성 등 제고를 위해 ESG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민간 ESG 확산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

1 ESG 정보제공·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

○ ESG 경영플랫폼, 투자플랫폼,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(링크 제공)하여 통합 정보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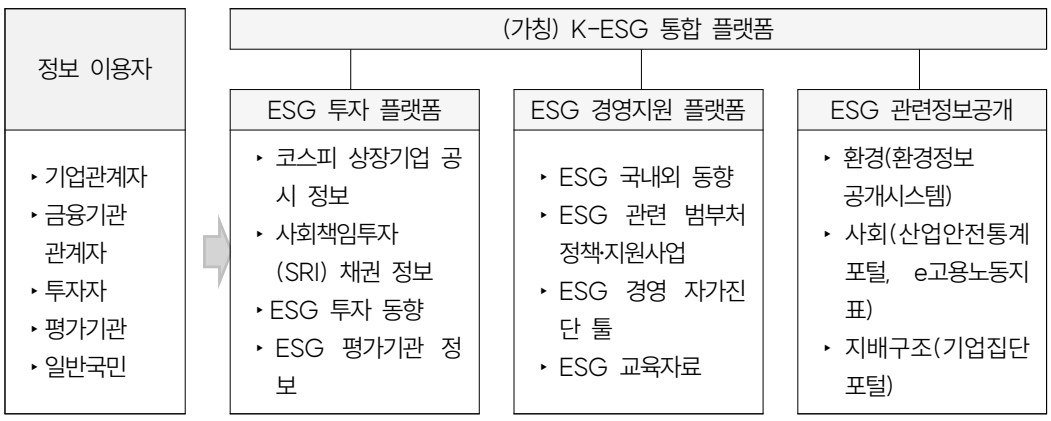
■ 'ESG 경영지원 플랫폼' 구축하여 국내외 동향, 정부지원정책*, 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 정보를 종합 제공('23.1월)

* ESG 컨설팅, 융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

■ ESG 투자 플랫폼('21.12월 구축)은 모바일 서비스 개시, 정보 제공 다양화* 등을 통해 고도화('22.11월)

*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 평가등급을 결합한 시계열 정보 등

【 ESG 플랫폼 간 연계방안(안) 】



○ 부처별로 운영중인 환경정보(E), 노동·산업안전(S), 기업지배구조(G) 등 ESG 분야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

■ 환경정보는 공개항목을 정량평가 항목 위주로 개편 추진하고 환경정보 공개시기를 단축*('24년~)

* (현행) 6월말까지 전년도 정보 등록후 12월말에 공개 → (개선) 6월 선공개후 검증

■ 산업안전은 법령·지침 등의 재해 예방 자료 및 각종 산재 조사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도록 정보제공방식* 개선('22.12월)

* 과거 지침 또는 과거 사고사례 제시 → 최신 사고 사례·법령·사업장 산재예방관련 지침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자료 일체 제공

■ 지배구조는 주요 정보항목의 인포그래픽화, 타기관 정보 제공사이트로의 연결링크 생성 등 기업집단포털* 고도화('23.1월)

*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우수사례를 포털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

2 ESG 전문인력 양성

○ 국내의 ESG 관련 분야 인력(국제표준화기구(ISO) 인증심사원, 경영컨설턴트 등)을 ESG 전문가로 전환('22.12월)

* ESG 관련 전문교육·실무교육 등을 제공하며 '23년 최대 300명 육성

■ 공급망 실사, ESG 평가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

○ 환경 분야 인력 대상으로 ESG 평가·경영컨설팅·정보공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검증위원 자격 부여('23년)

○ 국내 ESG 전문가와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·포럼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ESG 전문가 역량 강화

○ 특성화 대학원·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(커리큘럼, '23년)을 개설하고 교육수

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

■ 경영·평가·공급망 실사 등 ESG 분야별*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 추진('24년~)

* ESG 경영 · 투자 · 평가 · 컨설팅, 환경 · 사회 ·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 석사 과정 개설

5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

◇ 공공기관 · 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 · 투자 선도로 민간 ESG 자발적 확산 유도

1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

○ ESG 위원회 구성(공기업·준정부기관), ESG 공시항목 확대* 및 경영평가 반영·환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 강화

* ('21)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, ('22)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, ('23) ESG위원회(예) 등

○ 환경·안전 등 분야별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

* (환경)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, (안전) 공공기관 CEO 안전교육 프로그램 알리오플러스 공개 등

2 연기금 등 ESG 투자 확대

○ 국민연금기금의 ESG 통합전략(ESG 요소 고려해 투자결정) 적용 자산군 확대(국내 → 해외 주식·채권)

■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투자 선언 이행을 위한 석탄채굴·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 마련 추진

○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('22년, 2,700억원)·탄소스프레드*('22년, 5조원)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확대

* 기업의 감축설비 설치, 저탄소 설비전환 지원 등에 대해 정부 이차보전

6 추진체계 : (가칭)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

○ (추진배경) 부처간, 정부·기업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ESG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

○ (역할)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기능

○ (운영) 기재부 차관 주재로 회의 개최('23년초 kick-off 회의 개최)

○ (구성) 기재부 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 + 민간전문가

* 산업부, 환경부, 중기부, 행안부, 고용부, 금융위, 공정위 등

【 민관합동 ESG 협의회 】

구성	▪ 기재부 1차관 주재, 관계부처 차관 + 민간전문가
기능	▪ 부처별 ESG 관련 정책 협의·조정 ▪ 기업계·금융계 등 민간 의견 수렴
주요논의사항	▪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정책과제 ▪ ESG 경영·투자 논의 동향 및 활성화 방안 ▪ ESG 발표 정책 추진실적 점검 ▪ ESG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Ⅴ 기대효과

1 ESG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 대응

○ 공시기준·의무화 일정 등 마련을 통해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·비교가능성을 높이고, 평가가이던스 등을 통해 ESG 평가 신뢰성 제고

○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며, 민간기업·투자기관의 ESG 확산 지원

○ 기업과 정부간의 일원화된 소통 협의체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·일관성 제고

→ 글로벌 ESG 확산에 대비해, 국내 실정에 맞는 ESG 인프라 구축

2 국내 중소·중견기업 부담완화·경쟁력 제고

○ 국내 ESG 경영 요구 확대에 대비해 교육·컨설팅 등 지원 강화로 중소·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

* ESG 이행 가능한 기업으로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가능

○ 우리 수출·협력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통해 ESG 대응력 향상 → 글로벌 ESG 제도화를 우리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

※ [참고] 국제 ESG 규율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
- ㅇ (공시국제표준화) ISSB의 국제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최소의 통일기준으로 적용 전망 > 우리 수출·협력 기업이 동 기준에 따라 국제 공시 필요
- ㅇ (탄소국경조정제도) 탄소배출이 많고 수출 비중이 높은 플라스틱·유기화학품 산업에 타격 예상(한국 CBAM 적용 품목(9개)의 대EU 수출규모 연평균('19~'21년) 55.1억불)
- ㅇ (공급망실사) 실사이행, ESG 전문인력채용, 컨설팅·교육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우리 수출·협력기업의 경쟁력 약화(자동차 부품사, 반도체 산업 등 우선 타격)

3 국내 ESG 경영·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

ㅇ 우리 기업이 재무적 이익뿐 아니라, 환경·사회·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도록 유도

ㅇ 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 기업·투자기관의 역할 강화

Ⅵ 향후 추진계획

과 제	'23년	'24~'25년	담당 부처
1 ESG 공시제도 정비			
❶ 공시 국제표준화			
▸ESG 공시 표준화 논의 참여			금융위
▸ESG 국내 공시기준 마련			금융위
▸ESG 공시 의무화 방안 마련			금융위
❷ 공시·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			기재부, 금융위, 환경부, 고용부, 공정위
2 중소기업 지원 강화			
❶ 중소·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			
▸K-ESG 가이드라인 고도화			산업부
▸체크리스트·자가진단 고도화			중기부
▸교육·컨설팅 강화			산업부, 중기부, 고용부
▸인센티브 제공			조달청, 금융위, 중기부, 산업부

❷ 수출·협력 중소기업 지원 강화	-
▸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향상사업	산업부
3 ESG 투자 활성화	-
❶ ESG 채권 발행·투자 활성화	
▸녹색분류체계 시행	환경부
▸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	기재부
▸사회적분류체계 마련	기재부, 산업부
▸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	기재부 등
▸ESG 지수 다양화 및 SRI채권 사후보고 강화	금융위
❷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	
▸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및 확산	금융위
4 ESG 정보·인력지원체계 구축	-
❶ ESG 정보제공·이용 활성화	
▸ESG 플랫폼간 연계 강화	산업부, 중기부, 기재부, 환경부, 고용부, 공정위
▸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	산업부, 중기부
▸환경정보·산업안전·기업집단 포털 고도화	환경부, 고용부, 공정위
❷ 전문인력 양성	
▸ESG 관련분야 인력을 ESG 전문가로 전환	산업부, 환경부
▸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신설	산업부, 환경부
▸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	산업부, 환경부
5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투자 선도	
❶ ESG 경영 촉진	
▸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	기재부
❷ 연기금 투자 확대	
▸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	보건복지부
▸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	금융위, 환경부
6 민관합동 ESG 협의회 설치	기재부 등